

도시재난과 시민안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Urban Disaster and Citizen Safety

김홍대*

Kim, Hong-Dae

요약

최근 수년간 국내외에서는 각종 재난이 잇달아 발생되고 있으며, 그 유형의 다양화와 규모의 대형화는 언제 어느 재난에 의해서 우리가 불행에 당하게 될 것인지 모르는 커다란 불안에 쌓이게 한다.

세계 도처에서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를 입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2~3년간 상상하기 어려운 대형의 인위재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다. 그러므로 각종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법체계, 조직의 구성운영, 대시민 홍보계획 등을 검토하고 사고유형별 대처방안 강구와 시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재난의 예방 및 대처방법을 숙지함으로써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Keywords : 시민안전, 도시재난, 자연재해, 안전의식

1. 서론

서울시는 도시방재종합대책 운영규정에서 “도시방재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자연재해, 인위적 재해)의 예방,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도시재해”는 단순히 농촌과 대비한 지역적 의미가 아니며, 도시생활을 위해 자연공간에 과학과 기술을 통하여 인공적으로 구축된 구조물의 파괴에 따른 도시생활 기능의 마비와 고밀도성으로 인해 그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를 총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재해의 원인이 지진, 태풍, 홍수, 설해 한발 등 자연적인 것과 가스폭발, 시설물 붕괴, 화재 등 인위적인 것을 불문하고 그 피해와 영향이 도시특유의 형태와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건축물의 피해를 Hard적 피해라고 한다면 수도·전기·통신·가스 등 Life-Line의 기능마비에 의한 피해를 Soft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재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의 구조적 적

해와 함께 기능마비에 의해 정상적인 도시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빚어내는 Hard적 재난과 Soft적 재난의 복합재해이며, 특히 Soft적 피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며 이러한 도시방재의 개념을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한 것은 1993년 5월 서울특별시 도시방재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비롯된다.

2. 본론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부터도 항상 위태로운 상황에 있으며 재난의 유형 또는 다양화, 대형화 되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재난의 예측능력을 기르고, 그에 따른 예방과 수습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안전과 관련하여 안이하게 대처해오던 행태들이 모두 변화되어야 하겠다.

즉 모든 시설물은 건설 위주에서 관리 우선으로 편이, 신속 위주에서 안전위주의 시설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행정 형태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안전에 대해 불감증에 젖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동안 시 해왔다.

풍수해는 몇 년 안에 한번 있을 정도이고,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도 실제로 나오는 직접 관계가 없는 듯이 느껴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변에서도 교통사고,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크고 작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때 우리도 이제 안전에 대해 침묵 있게 논의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가스사고가 나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을 소리 높이고, 건축물이 붕

* 학생회원 ·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재난안전전공 석사과정 kh721@hanmail.net

괴되면 모든 건물이 붕괴되듯이 오직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조할 뿐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는데는 소홀하게 대처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임시방편적 안전대책보다는 모든 분야의 안전을 보다 종합적,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난의 예방수습에 대한 기능적 역할분담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조직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재난이 없으면 안전관리 부서의 기구 및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의 유지 보수비용을 축소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 관련 분야의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악순환은 사라져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의 과감한 투입과 지속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펴나가는 한편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구성, 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시설의 개선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야 한다.

설계에서 준공까지 단계별 감리, 감독을 강화하고 입찰과 하도급등에서 발생하는 비리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하겠다.

각종 재해의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기술된 재해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며, 특히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 및, 교통사고 시 시민의 행동요령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3. 결론

시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고 그것이 생활 습관화 되어야 하며 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인력과 선진기술 및 첨단 장비의 조속한 확충으로 건설, 교통, 환경, 보전 등 모든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안전사항을 검토하고 적용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예방과 대처를 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사고시 안내원의 침착하고 안정된 안내가 필수적이거나 평시교육과 훈련의 미흡으로 작은 사고에도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이제까지의 여러 재난을 교훈으로 삼아 연구하고 교육하고, 개선하여, 재난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방재학회 (2018) 도시계획과 방재

행정안전부 법률제 17698호(2020.12.22.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법률제 18284호(2021.06.15.제정) 자연재해대책법

서울특별시 서울조합방재센터 (2020.02.11.) 서울특별시 도시방재종합 운영규정